민선 6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오세은 한밭대학교 건설환경학공학과 교수

I. 서론

2014년 7월 1일 대전시는 민선 6기 대전시장의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서 새로운 민선시대를 활짝 열었다. 민선시장을 맞이하여 백오십만 대전시민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따뜻한 대전, 건강한 대전, 안전한 대전을 만들고 경제와 문화가 살아있는 활력 도시를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민선시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전 시정을 이끌 대전시장의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의 삶이 보다 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서고동저'(西高東低)의 도시로 신규개발이 주로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주요 기관들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한 결과 동서(東西)간의 도시 내 불균형이 모든 사회경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하여 지역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인구도 지난 수년간 1% 미만의 낮은 성장률로 지금까지 고도 성장기에 입안된 각종 정책 및 규정 등을 '저성장시대'

및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할 시점이다. 2007년에 발표한 유엔의 '세계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 인구 중 약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205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70%에 해당하는 인구가 도시에 생활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사회·경제·문화적 문제뿐아니라 이들 요소로 조화롭게 유지하는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숲이 갖추어진 「환경적 삶의 질 최고 도시」의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한 도심 속 녹지 확대, 상하수시스템 재정립, 생태하천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장의 약속사업 실천방안으로 시민경청위원회에서 발간된 "약속, 그리고 선택" 공약집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 관련된 정책사항을 발췌·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미래도시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민선 6기 당선자의 시민과의 약속사업

1. 핵심과제

민선 6기의 정책공약은 시민과 소통하는 경청의 리더십,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의 기분 좋은 변화를 모토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살맛나는 경제도시", "아름다운 과학문화도시" 등 총 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6대 핵심과제의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경청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표 1]은 핵심과제별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시민경청위원회 분과

분과		
	시민참여위원회	
	정책위원회	경제·과학·일자리 분과
		원도심, 도시재생, 환경분과
		보건·복지·여성 분과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과
	시정현안 특별 위원회	

2.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활력 있는 도시로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과학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도시재생 구현, 친환경 녹색 환경도시의 대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3. 추진내용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실천공약은 원도심 · 도시재생 · 환경분과에서 검토되었으며, 핵심공약 및 세부내용으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재생 분야에 총 8개의 세부실천내용이 있으며, 생태보존을 통한 친환경 녹색대전에 총 4개의 세부실천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2]는 핵심공약별 세부과제의 추진부서 및 추진기간 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실천공약 내용

핵심과제	핵심공약	세부내용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	도심재개발 방식의 전환
		옛 충남도청 활성화
		도심재생추진본부 설치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테마 전시관, 거리 조성
		에디슨 전시관 등 유치 추진
		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 : 우리동네프로젝트
		용전근린공원 조성
	생태보전으로 친환경 녹색대전	환경질환센터 설치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재생 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표 3] 핵심공약별 세부과제의 추진부서 및 추진기간

핵심 공약	세부 과제	담당부서	검토 결과	추진기간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도심재개발방식의 전환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추진	단기
	도심재생추진본부 설치	도시재생과	추진	단기
	옛 충남도청 활성화	도시재생과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산업과 신성장산업과	검토 후 추진	장기
	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 : 우리동네 프로젝트	도시재생과	추진	장기
	용전근린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재검토	장기
생태보전으로 친환경 녹색대전	환경질환센터 설치	환경정책과	추진	단기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환경정책과 농업유통과 주택정책과	추진	중기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경제정책과	추진	중기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환경정책과	추진	단기

3. 추진전략

3-1.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

3-1-1. 도심재개발 방식의 전환

1) 개요

• 관 주도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재개발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시와 인구 성장 둔화에 따라 주택 등 도시시설 수요가 줄어 신도심 개발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시가지 개발을 억제하는 지속가능 도시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 현황

• 대전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도시와 인구의 성장 둔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정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짐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도시성장의 둔화는 인구정체에 따른 기존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 노년층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시서민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소형주택의 경우 임대형 주택수요가 많아 민간 대형주택 공급 위주 정책의 변경이 시급하다.

• 이러한 도시 및 인구 여건은 중대형 민간 아파트 공급 중심의 신시가지 개발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존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성장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3) 추진방향

• 인구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원도심 재생에 성공하려면 인구를 분산시키는 신도심 개발 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의 특성과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하되 주거와 준주거, 상업 기능이 유기화 될 수 있도록 재생되어야 한다.

• 녹지가 있고 문화공간이 있는 도시 재생

– 도시재생지역 녹지공간을 관련 기준 이상 확보하고(도시재생구역 세대당 면적의 2%이상), 주거지내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이 멀리 움직이지 않고 여가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추진일정

•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출구전략 마련 : '14. 12월

•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 '15. 6월

• 도시성장관리 로드맵 이행 : '15. 6월 이후

3-1-2. 옛 충남도청 활성화 ⇒ 옛 충남도청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

1) 개요

• 원도심 재생의 구심점이 될 충남도청사 이전 적지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

함에 있어 근대도시유산과 문화예술자원, 도시공간기능 및 배치에 관한 관심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원도심 재생을 견인하고자 한다.

2) 현황

• 원도심 인구는 1992년 60만4천명에 이르렀으나 20년 후인 2013년 51만6천명으로 감소하여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며, 동반하여 지가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 원도심 재생을 위해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사업비 투자가 지속되었으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사업 집행으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도심의 실질적 재생과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구 충남도청사는 중부권의 행정, 문화, 정보의 중심지로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민선 5기 들어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원도심기획단이 입주해 있으나, 당초 계획한 만큼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추진방향

• 근대건축물인 구 충남도청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이 가장 바람직하다.

•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산만하고 일관된 주제가 없다. 근대도시 요소,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자원, 거주민의 생활적 요소 등을 무시해 도시특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사업계획들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원도심의 기능 및 설계(디자인)방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총괄도시계획가(건축가)가 주재하는 공공도시(건축)포럼을 구성하고 다양한 토론과 공론을 통해 혁신적인 원도심 종합계획안을 만든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및 활용은 건축물의 특성 및 주변여건과 잘 조화되는 사업으로 원도심 문화예술특구의 중심기능을 제대로 수행 가능함은 물론 대흥동과 선화동 일대의 원도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의 유치문제는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옛 도청사의 대전시 이관이 결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므로 도청이전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도청특별법 제정에 어렵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칭 '충남도청 이전적지 시민활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 정당 및 국회, 정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긴요하다.

• '충남도청 이전적지 시민활용 추진위원회'는 100명 내외의 시민사회단체, 의회,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부, 국회 로비를 진행하고, 타 시도와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한다. 또한, 옛 도청사 활용방안은 전문가와 관련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하는 시민참여방식을 통해 성안하도록 하고 최종안도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4) 추진일정

• 전담TF팀 구성 및 활동 : 2014. 9월
•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도시재생본부 설치 : 2014. 12월
• 충남도청 이전적지 시민활용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2014. 12월
• 과학문화도서관 개관 : 2016. 4월
• 한예종 중부캠퍼스 개교 : 2018. 6월 이내

3-1-3.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1) 개요

• 충남도청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 계승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의 옛 충남도청 유치를 추진한다.

2) 현황

• 문화 분과 제시사항은 아니나 문화 분과에서 검토한 결과, 대전지역 내 순수예술 분야는 대학들도 예술분야 학과들이 폐과 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예 건양대 예술관련 6개 학과 폐과.

대전대, 중부대 무용과 폐과. 전공만 존치)

3) 추진방향

• 대전만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예술대학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대학으로 대전지역대학과 의 경쟁이 아닌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의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다.

• 본교 이전이 안 될 경우 영상관련, 애니메이션, 실용음악 등 문화산업 기반의 관련 학과를 중점적으로 유치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예술관련 음악, 미술 외 종합예술 분야의 세계적인 마스터클래스 센터 유치를 권장하고, 기간별 운영체제를 도입한다.

4) 추진일정

• 검토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4. 8월

3-1-4 테마 전시관, 거리 조성

1) 개요

• 시민은 물론 외지인을 유인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특성화 전략으로 테마거리 조성 및 테마전시관을 설립, 운영 지원한다.

2) 현황

• 중앙로 일대 원도심에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근대건축물이 산재하나 관리도 부실하고 특징을 부여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구 산업은행 건물은 사설안경점에 매각됐고 안경박물관을 개관했으나 시민관람객 유치 및 거리특성화사업과 거리가 먼 상황이고, 선화동, 대흥동에 산재한 근대건축물들도 창작센터나 카페로 활용되지만 주변 거리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도심의 섬으로 존재한다.

• 중앙로 일대는 대전의 청소년과 청년층 밀집지역이고 청년문화가 왕성한 곳이지만

극장이나 공연장, 카페 등 청년문화를 생산·향유할 전용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된 상업시설들만 난무해 이용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3) 추진방향

•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옛 충남도청사까지의 1.1km 구간 중앙로를 비롯한 주변 일대를 특성화거리로 전환·추진한다.

– 중앙로 대 중교통 전용몰 조성, 대전역 우측 중앙시장 일대는 전통상가 거리, 은행동 구 대전극장통은 도시여행자의 거리, 으능정이와 대흥동은 젊음과 예술의 거리 등 현재의 지역특성과 발전가능성, 전국적 경쟁력 등을 고려해 테마를 선정하고 거리 조성 및 관련 산업을 도입한다.

• 대전의 첫 인상을 바꿀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 시민합의를 거쳐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한다.

• 특히, 만화, 웹툰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전시, 예술 활동의 거점지역조성가능성과 은행동 일대에 만화거리 및 만화마을 조성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대전시민센터, 청소년위캔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4) 추진일정

• 중앙로 일대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 6월

• 시민공청회 및 지역단위 주민조직 설명회, 시민합의회의 : 2015. 12월

• 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몰 조성사업 시행 : 2016. 3월

3–2. 생태보전으로 친환경 녹색대전

3–2–1. 환경질환센터 설치

1) 개요

• 도시환경오염원의 증가 및 면역력 저하에 따라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환경성 질환관리 및 예방을 환경업무에 추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관리, 대응책을 마련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 현황

• 전국적으로 환경성질환자 수는 685만명(2010년, 전년 대비 8% 증가)으로 이들의 진료 및 치료비로 연간 2,509억원이 소요된다.

• 대전지역의 환경성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어린이들 또한 3명당 1명꼴로 높아(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 알러지성 비염 : 천명당 123명(전국 110명), 아토피 피부염 : 천명당 25명(전국 21명), 천식 : 천명당 44명(전국 46명)

– 어린이 눈병 26.5%, 비염 및 축농증 등 콧병 36%, 인후염 등 목구멍 질환 22.2%, 기관지염 · 천식 질환 17.6%,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 질환 26% (대전어린이환경성 실태조사, 2010)

3) 추진방향

• 환경성 질환 관리기능을 환경업무에 추가한다.

– 환경국에 환경보건계를 신설하여 정기적인 환경성 질환 발병 원인 및 지역환경 조사, 환자이력관리 등을 통해 대전시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책발굴을 지원하도록 한다.

•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환경정책위원회에 환경보건분과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환경성 질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환경성 질환자 치유를 돕기 위한 아토피 치료센터는 인근 시군(금산, 진안 등)과 협력하여 지원책을 찾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치유의 숲 조성 및 탐방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4) 추진일정

• 대전시 환경보건조례 제정 및 환경국 조직 개편 : 2014. 12월

• 환경민관협력에 의한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2015. 6월

3-2-2.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1) 개요

• 대전 도심의 자연생태계인 월평공원과 그에 연접한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생태 ·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취약한 도심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주변지역 개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2) 현황

• 서구 월평동–정림동에 걸쳐 위치한 도솔산과 갑천이 연접해 있어 대전의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이며, 이 지역의 생태적 우수성은 여러 차례의 생태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생태 · 경관적 보전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 도안동 서남부 신시가지 개발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 및 차량운행에 따라 갑천 자연하천 구간 생태계에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갑천변에 계획된 인공 호수공원 조성 사업비(대전시 추산 2천억원) 마련을 위한 10만㎡의 택지개발사업은 이 일대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추가적 부담이 된다.

• 다만, 갑천 호수공원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한 택지개발을 위해 대전시가 호수공원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 호수공원 옆에 계획되어 있다.

3) 추진방향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 · 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 지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보전계획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이후 호수공원 터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도 시민참여방식으로 만든다.

4) 추진일정

• 갑천 생태 · 경관 보전지역 지정 위한 계획 수립, 의견수렴 : 2014. 12월

• 갑천 생태 · 경관 보전지역 신청 및 시민참여 관리 : 2015. 6월

3-2-3. 신재생 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1) 개요

• 특·광역시 최저수준인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원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현황

• 소비도시 대전은 산업구조가 취약하지만 넓은 도시 면적, 원도심 낙후지역 다수, 서비스업의 강세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산업도시인 울산,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 광주보다 높다.

• 전력소비량을 보면 대전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5,853kwh로 울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력자립도는 2.21%로 서울, 대구, 광주와 함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지역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은 미미해 소각장 폐열 회수 외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가 타 도시에 비해 열등한 상황이다.

3) 추진방향

•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 금고동 매립장,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공공기관 옥상 및 주차장 등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로 가능한 지점을 산출하고 기관협의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림으로써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도시로 전환한다.

• 시민햇빛발전소 설립 지원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전시가 대응자금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드는 일을 지원한다.

– 대전의제21협의회, 사회자본지원센터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늘려나간다.

4) 추진일정

• 시민참여 에너지 자립 도시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모색 : 2015. 4월

• 에너지 자립마을 선언 : 2015. 6월 5일 환경의 날

• 재생가능에너지단지 착공 : 2016. 6월

3-2-4.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1) 개요

•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기후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대전시 행정에 기후대기정책과를 설치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민간인 기후변화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시민대상의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현황

• 대전시 환경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대기정책과의 한 업무로 분장돼 있어 대기질 관리행정을 넘어서지 못한다.

• 기후강사 양성교육 및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나 그린스타트 업무의 하나로 배치돼 전문적 특화가 어렵고 강사관리 및 시민교육의 체계화가 어렵다.

3) 추진방향

• 기후변화센터 설치, 운영 지원

– 한밭수목원 열대식물원에 설치된 기후변화센터 공간을 전체 기후변화센터로 개편해 전문성을 갖춘 기후변화교육기관으로 운영.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운영을 위탁하여 기후변화 강사 양성 및 학생·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4) 추진일정

• 기후변화센터 기구화 : 2014. 12월

• 기후변화센터 운영 : 2015. 1월 이후

Ⅲ. 결론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동서(東西)간의 도시 내부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과감히 큰 폭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최근 원도심의 일부 지역에서 새싹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활기는 지속적으로 확산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민선 6기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세부공약 추진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즉, 환경용량 범위에서의 개발인 '생태적 지속가능성', 가치규범을 준수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의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세월호'에서 얻은 교훈처럼 안전이 우선이 되는 도시기능,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및 자원순환 도시 등 시민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민선6기 권선택의 약속사업실천방안, 약속,그리고 선택",** 대전시민경청위원회, 2014.6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타
- **"환경백서2013",** 대전광역시, 2012.12.
- **"세계도시화 전망 보고서",** UN, 2007